

# 간호사 꿈꾸던 25세 나주 청년 신병교육대서 숨져

완전군장 후 '얼차려' 중 쓰러져 유족들 "지병 없었는데...비통" 자녀 입대 부모들 "안전 강화를" 군 인권센터 철저한 수사 촉구

광주·전남서 대학 생활을 하던 지역 청년이 입대 후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군기훈련'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훈련병은 교육 중 자신의 건강 이상을 상급자에 보고했으나 훈련을 지속, 연병장에서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육군은 철저한 조사·현충원 안장 등 사후 처리를 약속했지만,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걱정은 커져만 간다. 전문가들은 의료진 훈련장 미배치 등 근본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주문했다.

2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지난 23일 훈련병 박모(25)씨가 군기훈련 도중 쓰러졌다. 박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5일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지시하는 정신수양·체력단련을 말한다. 과거에는 '얼차려'로 불렸다.

입소 9일 차인 박씨는 훈련 별점이 쌓인 동료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40kg 달하는 전투장구류)으로 연병장을 돌았다. 1시간 가량 이어진 군기훈련 중 여러 차례 체력 저하를 호소하던 박씨는 지시 중단을 요청했으나 무시, 결국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육군 내부 규정에는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보행(걷기)만 가능하



미2사단 장병들이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최고전사대회에서 완전군장 후 행군하고 있다.

뉴스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박씨는 보행이 아닌 구보(달리기)를 했다. 또 군기훈련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 부여 등의 규정도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간경찰은 박씨의 사망과 관련해 합동 조사반을 꾸려 27일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 부검을 의뢰·진행했다.

박씨의 빈소는 27일 오후 고향 나주에 차려졌다. 발인 일정은 육군과 논의 중이다. 군은 전날 박씨의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 시신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육군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

반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씨의 유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모든 일을 뒤로하고 사태 수습 중이다. 박씨는 보건지소장을 지낸 가족의 영향으로 지역 간호대학에 진학, 졸업 후 환자를 돌볼 날을 기다리던 '예비 간호사'였다. 더 이상 입대를 미룰 수 없어 선택한 국방의 의무에서 그 꿈의 마침표를 찍었다. 박씨 유가족은 "신경써야 할 큰 지병은 없었다. 아이가 겪은 갑작스런 상황에 비통할 따름"이라고 말을 아꼈다. 자녀를 입대시킨 부모들의 마음도 심란하다. 최근 군 내부에서 크고 작은 인명·안전 사고가 잇따

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김모씨는 "12사단을 비롯해 32사단 수류탄 사고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걱정 없이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입대한 아들이 같은 변을 당했다 상상하니 정말 아찔하다. 매 순간 연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잘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바람을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세종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실제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는 9월 아들이 입대한다는 박장현(52)씨는 "'얼차려'라는 단어가 옛 군사절 있던 말이다. 인권함양이 많이 된 요즘도 군기를 그리 잡을 줄 몰랐다"며 "예전엔 '내 아들은 군대를 안 가겠지'하는 마음이 있었다. 군대가 최신·고도화될 것이라고도 봤다. 그런데 되레 더 과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젊은이들이 국가에 끌려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안전 등 제도적 울타리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군 인권센터는 "박씨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한 한 훈련병이 현장에 있던 집결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체벌 중단 등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는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다.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민 동강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기훈련을 하게 된) 별점 제도가 문제가 많다. 영창이 없어지면서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군인정신 교육'을 줄 수 있게 됐다. 부대마다 체벌 경중·기준이 달라 31사단 같은 후방부대는 별점 제도가 없기도 하다"며 "현장 관리·감독도 재점검해야 한다. 군기훈련을 진행할 때 명령·집행권자와 군의관이 상주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는 '회복 골든타임'을 놓친만한 허점이 있었던 것 같다. 빠른 안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 배치·매뉴얼 정립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 "티켓 팔아요"... 학생들 용돈벌이 수단된 대학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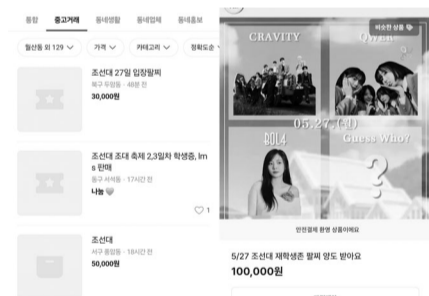
최정상 아이돌 '뉴진스' 등 출연 3만~10만원 '입장 팔찌' 등 거래 대학 "3단계 본인 인증절차 도입"

인기 최정상 아이돌 그룹 등 유명 가수들의 출연 소식에 대학교 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학생들이 돈을 받고 자신의 학생증을 양도하거나 입장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주 조선대학교는 최근 교내 축제에 '탈지역급' 출연진 라인업을 발표하며 재학생과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개최되는 조선대 축제에 걸그룹 뉴진스를 비롯해 불빨간사춘기, 싸이 등 인기 가수의 공연이 예정되자 학생증·입장 팔찌 양도 게시글이 중고장터 및 SNS 곳곳에 게재됐다.

재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재학생 존' 입장 팔찌는 중고장터에서 3~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학생들은 '입장 실패해도 환불 불가', '명의 빌려드립니다', '입장 팔찌 판매' 등의 게시글을 올리며 재학생 외 관람객에게 '암표 팔이'를 이어갔다. 입장 팔찌는 조선대 재학생에게 선착순으로 5000개 지급됐다. 외부인과 팔찌 미보유 재학생은 '스탠딩 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재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재학생 존'은 축하 공연 무대에 오른 연예인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구역이다.

특정 연예인을 보기 위한 암표 매매가 늘고 학생들이 개인 명의를 사고파는 등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조선대 축제가 개최되는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를 비롯해 불빨간사춘기, 싸이 등 인기 가수의 공연이 예정되자 학생증·입장 팔찌 양도 게시글이 중고장터 및 SNS 곳곳에 게재되고 있다.

의 행위로 용돈 벌이를 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축제'라는 대학 축제 본래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 측은 명의 도용을 막고 재학생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해 디지털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재학생 존 입장 팔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학생증)·카카오톡 인증서·LMS(학습관리시스템) 등 세 가지를 모두 인증해야 한다. 신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세 가지 수단 외 추가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조선대학교 현장 스타프는 인증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입장 티켓을 부여하고 손등에 도장을 찍어 주는 등 타인에게 학생증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본인 확인을 철저히 했다. 명의 도용·위조·양도가 적발될 경우 축제 기간 동안 공연 관람을 제한한다는 공지도 내걸었지만 공연 시작 전까지 암표 거래는 기승을 부렸다.

글·사진=나다운 기자



북구보건소, 서방천 일대 방역작업

고 있다.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방역반원들이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서방천에서 연무기 등을 이용해 모기 유충 제거 작업을 펼치

나건호 기자

## "한일 파트너십 기금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우롱"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반발

시민단체가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반일 정서 달래기용이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2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게이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 기금) 1억엔을 추가 기부하기로 깜짝 발표한 것은 최근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두고 한국 내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일본 재계가 제3차 번째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설립한 미래 기금에 게이단련이 2억엔(한화 약 17억 50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모임은 "미래 기금은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신 덤터기 쓰는 제3차 번째 방식의 해법을 내놓는 과정에서 큰 지탄을 받자 마치 일본 기업이 한일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 양 급조해 낸 눈속임용 장치에 불과하다"며 "미래 기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우롱하기 위한 '우롱 기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미래 기금에 대한 일본 기업의 추가 기여를 평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라인 사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며 "지난해 강제동원 굴욕 배상 문제를 발표할 때는 느닷없이 피해 국민 우리가 가해자인 '일본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며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것인가"라며 규탄했다.

강주비 기자